



관세 위법 판결의 역설: 한국은 왜 더 위험해졌다?

미 연방대법원 판결 심층 분석 및 향후 무역 시나리오

Executive Summary: 승자의 저주



사법적 패배, 경제적 혼란

연방대법원의 6:3 위법 판결로
트럼프의 '상호관세'와 중국 대상
'펜타닐 관세'가 무효화됨.



상대적 경쟁력 상실

모든 국가의 관세가 일괄 인하되면서,
선제적 협상으로 관세를 낮췄던 한국과
일본의 '협상 우위'가 소멸함. 반면
경쟁국(중국, 멕시코)은 무임승차 효과를 누림.



2차 무역전쟁의 서막

트럼프는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무역법 122조(10% 일괄 관세)를 즉각
발동했으며, 향후 무역확장법 232조(안보)
및 301조를 통한 강력한 보복이 예상됨.



대법원의 판결: 무엇이 사라지고 무엇이 남았나

INVALIDATED (소멸/위법)	SURVIVING (유지/합법)
트럼프의 상호관세 (Trump's Reciprocal Tariffs) 	 ACTIVE 무역법 301조 (Section 301): 중국 지적재산권 침해 보복 관세 (20%~)
대중국 펜타닐 관세 (Fentanyl Tariffs on China) 	 ACTIVE 무역확장법 232조 (Section 232): 국가 안보 위협. 철강(50%), 자동차(15%)

Insight: 중국은 '펜타닐 관세' 소멸로 이득을 보았으나,
한국은 철강/자동차 관세가 그대로 유지되어 실익이 적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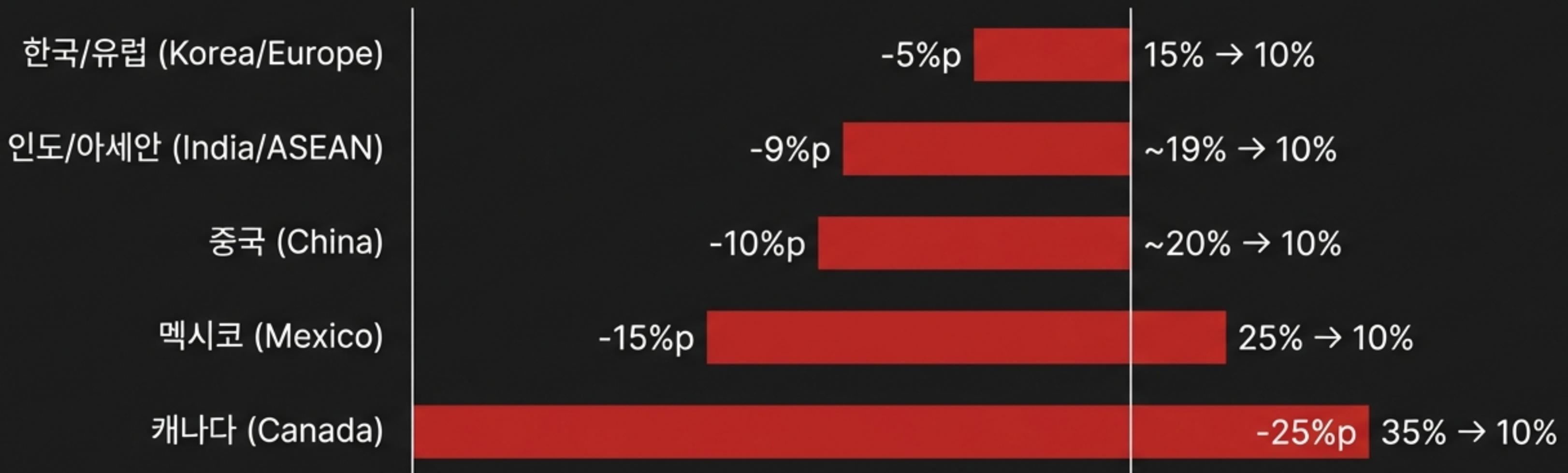
시장이 환호하지 않은 이유: ‘실효 관세율’의 함정



- **트럼프의 즉각 대응:**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Section 122) 발동 → 전 세계 일괄 10% 관세 부과.
- **결과:** 실질적인 관세 인하 효과는 **3%p**에 불과함.
- **배센트 재무장관:** ‘우리는 동일한 관세 징수 능력을 회복할 것.’

승자의 저주: 누가 진짜 이득을 보았는가?

관세 인하 폭 (Magnitude of Tariff Reduction)



협상하지 않고 버틴 국가(캐나다, 멕시코)가 최대 승자.
협상으로 관세를 낮춰놓은 한국은 가격 경쟁력에서 상대적 손실을 입음.

'모범생'의 딜레마: 한국과 일본의 전략적 패착



대규모 투자 약속
(Investment Promise)

관세 인하 혜택
(Tariff Discount)

혜택 소멸
(Benefit Erased)

Historical Parallel: 1985년 플라자 합의 (Plaza Accord).
일본의 조급한 협상이 자국을 망쳤듯, 이번에도 성급한 타협이
한국과 대만, 유럽을 트럼프의 덫에 빠뜨림.

트럼프의 반격: 무역법 122조와 150일의 시한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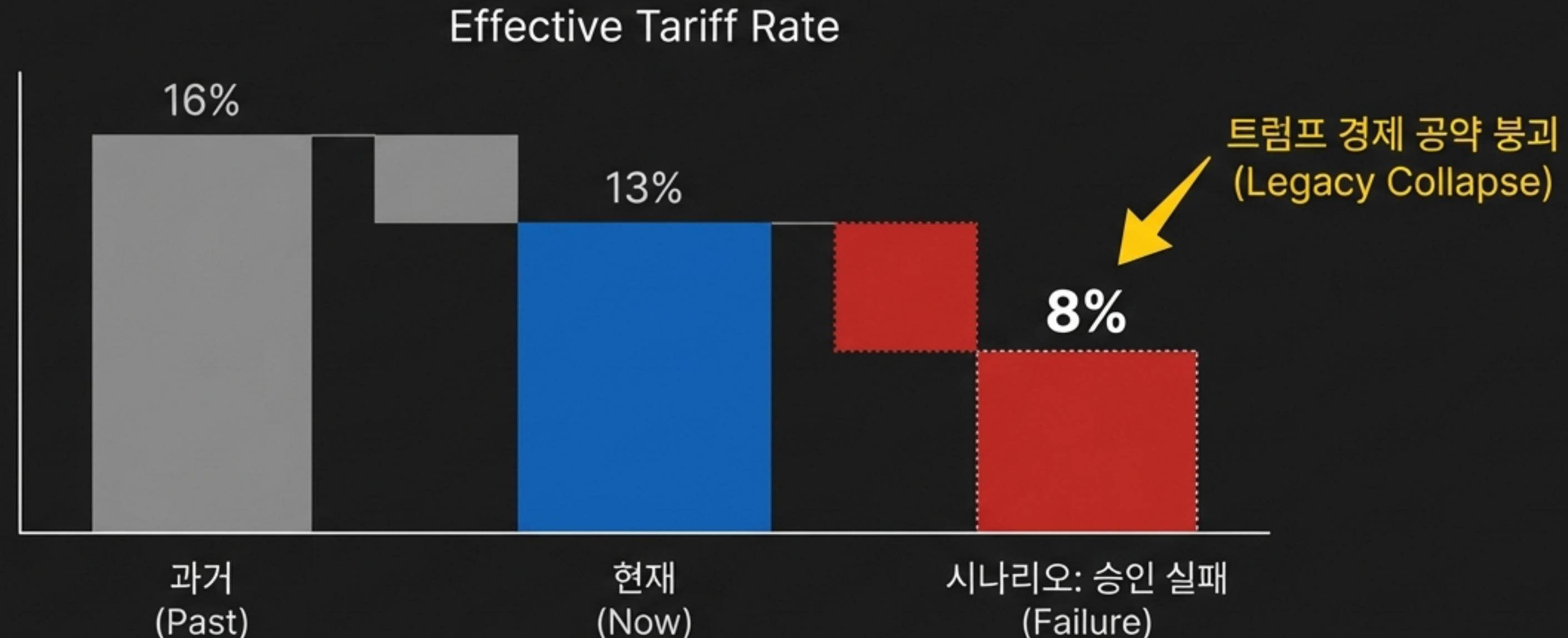


시한부 (Limited Time)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EPA)

- 내용: 10% 일괄 관세 (Blanket Tariff)
- 한계: 최대 150일 적용 가능. 이후 의회 승인 필요.
- 장애물: 공화당(GOP)은 전통적으로 자유무역 지지. 의회 승인 불투명.

벼랑 끝의 트럼프: 왜 확전(擴戰)이 불가피한가



만약 150일 뒤 의회 승인을 못 받으면 관세율은 8%로 추락.

그는 반드시 관세율을 16%로 복귀시키기 위해 더 강력한 독자적 수단을 강구할 것임.

트럼프의 무기고: 의회를 우회할 3가지 카드

무역법 301조 (Section 301)

The Threat



불공정 무역 보복.
세율 제한 없음.
단점: 조사/발동에
9~18개월 소요.

무역확장법 232조 (Section 232)

The Action



국가 안보 위협.
즉시 발동 가능.
장점: 대법원 합법 판결 완료.
가장 유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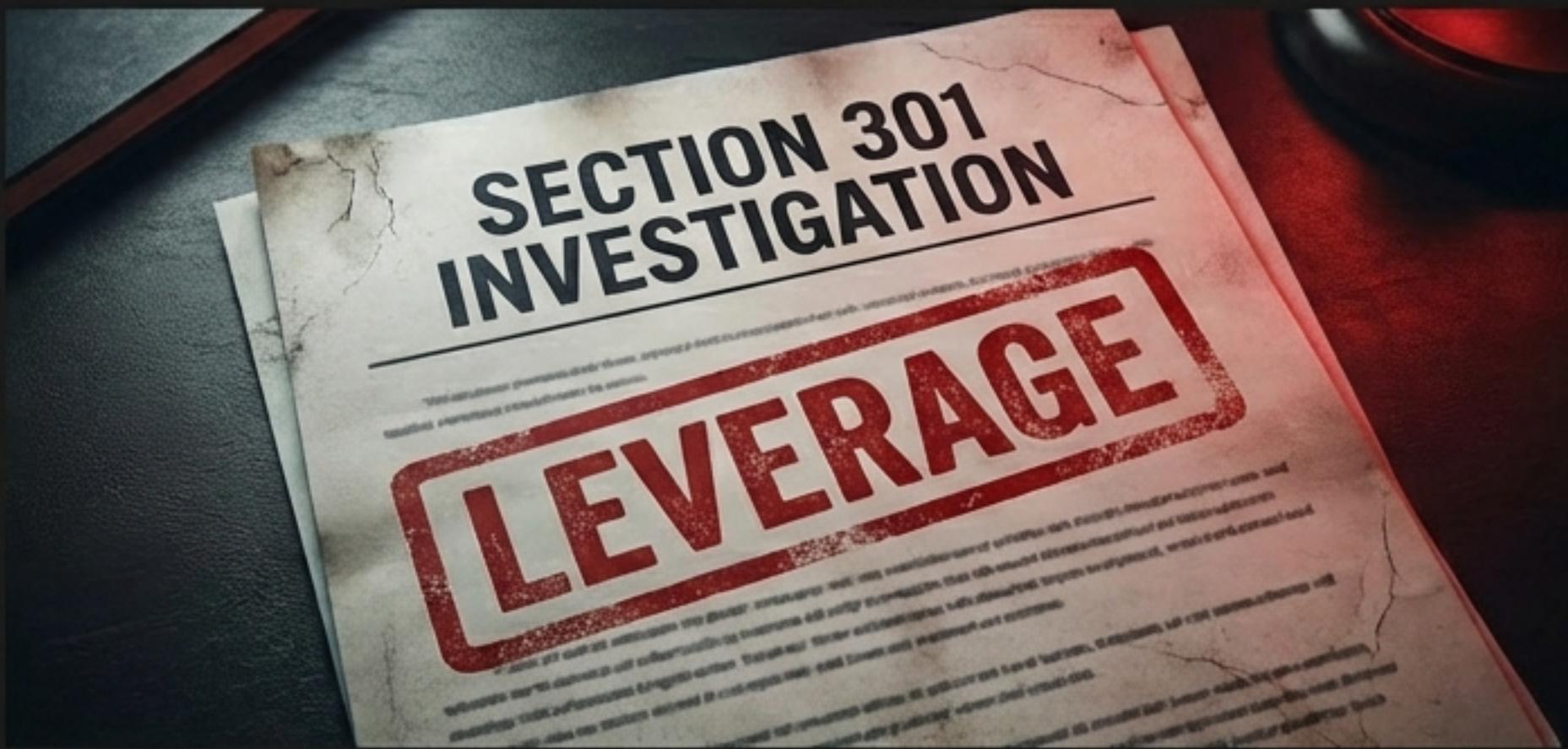
관세법 338조 (Section 338)

The Relic



미국 무역 차별국 보복.
단점: 대공황 악화의 주범.
정치적 부담 극대화.

전략 1: 무역법 301조 - 협상을 위한 공포탄



개념: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10개월+), 맞으면 치명적이다.

용도: 트럼프는 조사를 개시하여 상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

시나리오: 조사를 피하고 싶으면 투자를 하거나 자발적으로 돈을 내라.

위협: 한번 발동되면 영구적이며 세율 제한이 없어 가장 무서운 장기적 위협.

전략 2: 무역확장법 232조 - '안보'를 명분으로 한 실탄

위험성: '국가 안보' 판단
시 즉시 발동. 대법원
합법 인정(Free Pass).

타겟 (Target):

- 기존: 철강, 자동차.
- 신규 위험: 반도체
(Semiconductors).



러트닉 상무장관은
이미 한국 반도체에
대한 조사를 마쳤음.
세수 확보가 급해진
상황에서 관세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 상승.

한국의 위기: 경쟁국 대비 취약성 분석



향후 150일의 시나리오: 트럼프의 타겟 리스트



예상: 중국과 150일 내 합의는 불가능. 트럼프는 한국, 일본, 대만과 같은 동맹국을 압박해 단기 성과(세수)를 챙길 가능성이 높후함.

핵심 요약 (Key Takeaways)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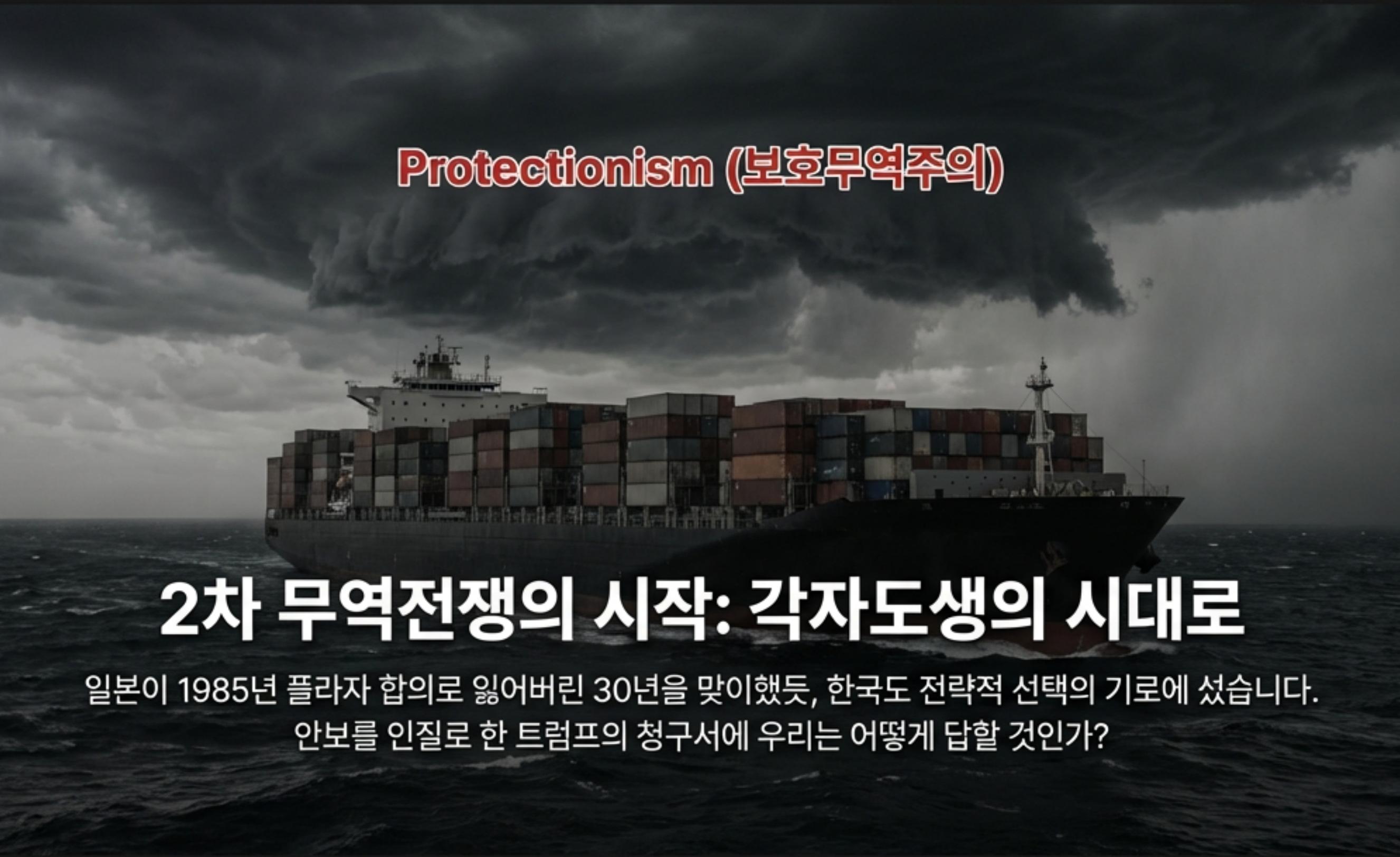
착각 (Illusion): 대법원 판결은 한국의 승리가 아니다. 상대적 가격 경쟁력 하락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다.

02

위협 (Threat): 10% 일괄 관세는 임시방편일 뿐. 트럼프는 세수 회복을 위해 무역확장법 232조(반도체/ 자동차)를 꺼내들 것이다.

03

현실 (Reality): ‘착한 협상’의 시대는 끝났다. 과거의 합의와 투자는 보호막이 되지 못한다. 모든 협상은 원점(Zero-base)에서 다시 시작된다.



Protectionism (보호무역주의)

2차 무역전쟁의 시작: 각자도생의 시대로

일본이 1985년 플라자 합의로 잃어버린 30년을 맞이했듯, 한국도 전략적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안보를 인질로 한 트럼프의 청구서에 우리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